



특허청 *지식의 시대*

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,
기업성장 전인

www.kipo.go.kr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3개년 계획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

보도자료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	과 장 문삼섭 사무관 정일남	042-481-5288
		1월 27일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지식재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구현

- 「2015년 특허청 업무계획」 발표 -

◆ 특허심사 前 심사관 도움받아 특허등록 더 쉬워진다.

- '예비심사제도·보정(안) 리뷰(review) 제도 도입' 등 「특허심사 3.0」서비스 시행
- 특허 심사처리기간 1개월 단축……, 특허수수료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

◆ R&D 전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으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한다.

- 수요자 맞춤형 '특허전략청사진' 구축, 중소기업 IP-R&D 연계전략지원 확대
- 국가 우수과학자 연구실 대상 강한특허 창출 지원 종합컨설팅 본격 시행

◆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준다

-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등 'K-브랜드보호 종합대책' 추진
- 지식재산분쟁 대응을 위한 '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' 수립

◆ IP금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,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을 육성한다.

- 2,000억원 지식재산담보 금융지원, 총 4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 조성
-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(IP-Star기업) 220社 신규 육성

◆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'발명교육지원법' 제정
- 생애주기별 발명교육 지원을 위한 '지식재산일반' 교과목 개발 '지식재산학점은행제' 시행

□ 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1월 27일(화), ‘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’이라는 제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

- 업무계획은 지난 한 해 특허청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, 2015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.

□ 특허청은 작년 한해 ‘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’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,

- 대내적으로 심사·심판체제를 혁신하여 내실을 다지면서,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.

□ 2015년 올해는, ‘지식재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’하기 위하여

- ① 신뢰받는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
- ②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
- ③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지원
- ④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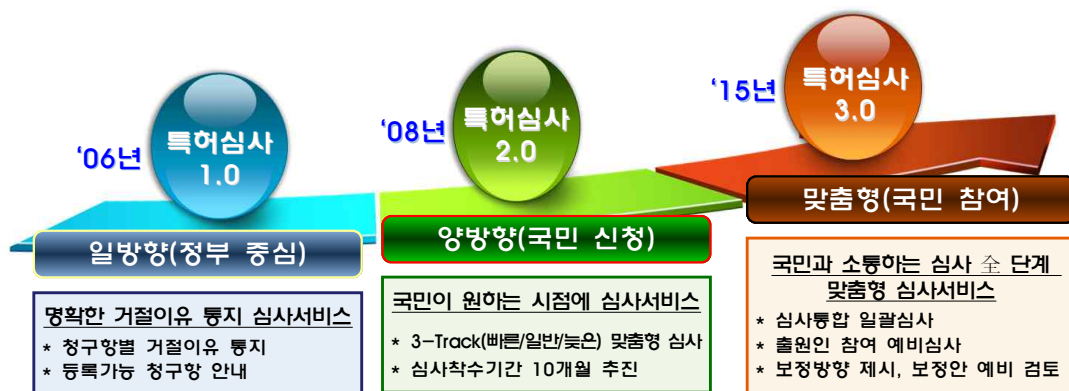
5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.

□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처한 일본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서의 새로운 넛크래커(nut-cracker) 상황을 극복하고,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1. 특허심사 前 심사관 도움받아 특허등록 더 쉬워진다.

□ 고품질 심사·심판 서비스 신속 제공

- 국민들에게 특허등록된 권리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권리라는 신뢰감을 주면서, 보다 쉽게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심사 쏘단계 맞춤형 심사서비스(특허심사 3.0)를 1월부터 추진중이다.



- 구체적으로는, 최초 심사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사 견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,
- 최종 심사전에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(안)을 정식 제출 전에 검토해주는 보정안 리뷰제도 등을 도입하며,
-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확대하고, 정확한 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.
- 심사·심판처리기간도 특허는 10개월, 상표와 디자인은 5개월, 심판 당사자계는 6개월로 단축하며,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용역을 확대(13.5% → 30%)하여, 심사품질도 제고할 예정이다.
- * 특허·실용신안(월):('14) 11 → ('15) 10, 상표(월):('14) 6.4 → ('15) 5, 디자인(월):('14) 6.5 → ('15) 5
- * 선행기술조사 용역 / 심사협력형 조사비율(%):('14) 52.8/13.5 → ('15) 57/30

□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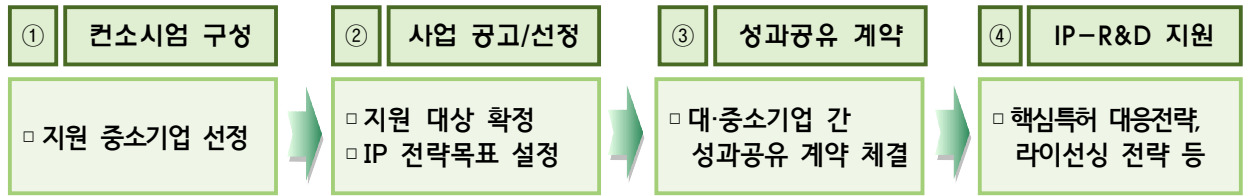
- 언제·언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수수료 고지·납부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며,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, 포지티브 방식심사 전면 실시 등 고객친화형 방식심사제도를 실시하고,
- 합리적인 연차등록료 개선 등 '산업재산권 수수료 장기 기본계획'을 3분기에 수립하여 수수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.

2 R&D 전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으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한다.

□ 정부 · 민간 R&D 효율성 제고

- 전 산업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거시(Mega) 특허 전략청사진 구축과 산업계 주요이슈 기술분야를 심층분석하는 테마기술 청사진 구축 등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며,
 - * 국가특허전략 청사진 구축(개) : ('14) 12 → ('15) 18 쏠산업분야(누적)
- 정부 R&D 성과물의 개인명의 출원·등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質 중심의 특허성과 지표를 개발·보급함과 더불어,
- 중소·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R&D 연계전략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 성과의 질적향상도 도모한다.
 - * IP-R&D 전략지원(정부+민간, 과제) : ('14) 255 → ('15) 258
- 국가 재원을 집중투자하여 개발중인 우수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,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을 대상으로 IP-R&D 전략 교육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며,
 - * ('14) 주요 과학자 4개 연구실에 컨설팅 시범 실시 → ('15) 6개 이상으로 확대
-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대·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·정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IP-R&D전략 수립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<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IP-R&D 시범 사업 추진절차 >



- 또한,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3D프린팅 및 의약분야의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신시장 개척, 상용화,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컨설팅도 상반기부터 제공한다.

□ 아이디어 창출 기반 강화

- IP 창조 Zone을 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, 지원범위를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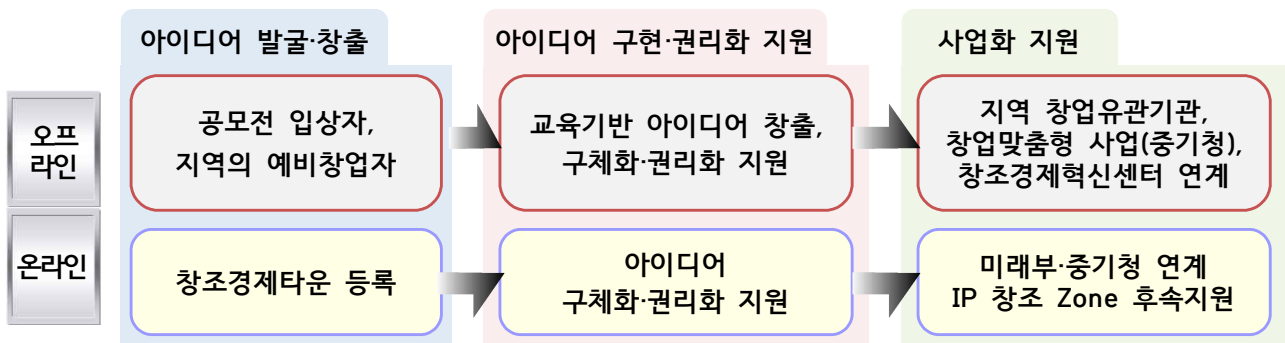
< IP 창조 Zone 구축·지원 지역 >

구축지역	강원	광주	대구	부산	인천(신설)	전북(신설)
인접지원지역	-	전남	경북	경남, 울산	경기	-

* IP 창조 Zone 미지원 지역인 제주·충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원

-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을 IP 창조 Zone으로 일원화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親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한다.

< 아이디어 권리화·사업화 지원체계 >



3.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준다.

□ 지식재산 침해 · 분쟁 대응 지원

- 우리기업이 해외지재권 획득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,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고,

* 분쟁예방·대응컨설팅/소송보험(개/社) : ('14) 283 / 119 → ('15) 312 / 123

-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중국, 동남아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'K-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'도 추진한다.
-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, 분쟁 대상·형태 등 기업 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송보험 상품을 개발·지원하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지식재산 보호 기반 조성

-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며,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,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원본증명 신청시, 대기업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
-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여 온·오프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약관을 확산하는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- 대외적으로는 선진 5개국(미국,중국,일본,유럽,한국) 특허와 상표 회의체인 IP5와 TM5 회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, UAE 심사협력모델을 기초로 특허행정의 한류도 확산할 예정이다.

4. IP금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,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을 육성한다.

□ IP금융 시스템 활성화

-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, 국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,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.

* 펀드결성 : 우리은행('14.12) → 국민은행('15.2) → 신한·하나은행('15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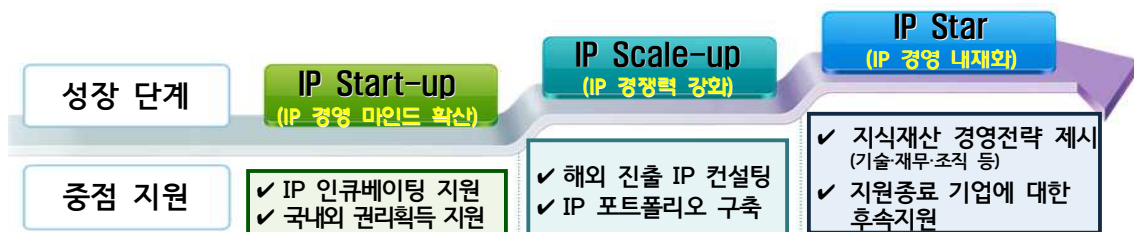
* 투·융자 연계 IP금융 지원(社/억원) : ('14) 303/1,658 → ('15) 400/2,000

- 또한,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거래체계 개편, 부처간 협력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도 도모한다.

□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(IP-Star기업) 육성

- 지식재산 경영 진단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.

* IP-Star 기업 수(누적, 社) : ('14) 846 → ('15) 1,066 (신규 220)



□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

-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
-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3)의 특허정보 DB를 개방하여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의 확대·개방을 통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식재산정보 활용 생태계도 조성한다.

* 지식재산 DB구축 건수(누적) : ('14) 2억7,120만건 → ('15) 2억8,500만건

5.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지식재산인력 저변확대

- '50주년 발명의 날'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발명품을 조성하고, 전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, 지식재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이외에 '지식재산일반' 교과목 개발, 사이버대학에 학점 이수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등을 시행한다.

* 초·중·고 발명교육센터 교육(명) : ('14) 200,000 → ('15) 220,000

* 지식재산 e-러닝 교육(명) : ('14) 460,000 → ('15) 470,000

- 또한,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해 발명교육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.

□ 지식재산 창의인재 및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

-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발명영재에 대한 지식재산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, 발명영재 교육 수료생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IP 창조 Zone과 연계하여 구체화·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< 실전창업 지원 프로세스 >



-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예비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한다.

*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(개) : ('14) 9 → ('15) 12

-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수준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IP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변리사 실무연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전문교육도 강화한다.

< IP 경영 Level-up 프로그램 추진방안 >



참고 1 '15년도 정책추진 방향

비전

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

목표

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

	추진전략	주요과제
1	신뢰받는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	- 가 고품질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 - 나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·운영 - 다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- 라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
2	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	- 가 아이디어 창출기반 확대 - 나 R&D 효율성 제고 - 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개선 - 라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협력 확대 - 마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
3	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	- 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- 나 지식재산권 침해·분쟁 대응 지원 - 다 IP금융 시스템 활성화 - 라 지식재산 사업화·거래 활성화 - 마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
4	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	- 가 지식재산 인력 저변 확대 - 나 지식재산 창의인재 양성 - 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
5	규제개혁 및 산하 공공기관 경영 개선	- 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- 나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

참고 2 '15년도 주요정책별 목표

1 신뢰받는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

1 심사·심판처리기간 단축(월)



2 심사서비스 패러다임 변화



3 기업의 특허 침해·분쟁 대응 지원

1 분쟁 대응·예방 컨설팅 지원(건)



2 소송보험 지원(건)



3 영업비밀 원본증명(누적 건)



2 특허정보를 활용한 R&D 성과 제고

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(누적 산업분야)



2 IP-R&D 전략지원(개)



3 표준특허 창출 지원(과제수)



4 지식재산 금융·사업화 지원

1 지식재산 보증·대출·투자 연계 금융 지원



2 특허기술 거래(건)



5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교육기회 확대

1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(수)



2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(수)



3 지식재산 e-러닝 수강 인원(명)



4 초·중·고 발명 교육센터 교육 인원(명)



5 지식재산권 담당 외국인 공무원 교육 인원(명)



참고 3 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

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		
제도명 (지원시책)	달라지는 내용	시행일자
01 지식재산 조기 권리화 지원 제도		
적극적인 상표권 부여	기업이 원하는 상표 중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암시하는 상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부여 ■ 상표심사정책과 ☎042-481-5274	'15.1.1
상표 선택범위 확대	공서양속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 - "NUDE"가 포함된 상표라도 상표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등록 가능 ■ 상표심사정책과 ☎042-481-5274	'15.1.1
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	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'한국디자인진흥원'에서 선정한 우수 디자인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 ■ 디자인심사정책과 ☎042-481-8353	'15.1.1
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가능	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 - 현행: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7	'15.1.1
일괄심사 대상 확대	국가 R&D 사업과제에서 창출된 특허를 출원할 때 일괄심사 신청 가능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8	'15.1.1
예비심사 대상 확대	예비심사 대상이 '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결정' 출원에서 '모든 우선심사' 출원으로 확대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516	'15.1.1
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	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와 보정방향을 공식 심사 전에 제시하는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516	'15.1.1
우선심사 대상 확대	공모전 등으로 발굴된 아이디어 관련 출원과 건설 신기술 인증 신청 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516	'15.1.1
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IP-R&D 지원	대기업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- 상·하반기 총 20개 과제 내외 ■ 산업재산정책과 ☎042-481-5931	'15.1월중
표준특허 동향조사 시범 실시	미래부·산업부 등의 표준과 관련된 R&D 사업의 과제계획시 표준특허동향조사를 시범 실시 ■ 산업재산정책과 ☎042-481-5931	'15.1월중

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

제도명 (지원시책)	달라지는 내용	시행일자
02 해외에서의 지재산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제도		
해외권리화 지원대상 확대	개인 등 예비창업자에게도 해외권리화를 지원 - 건당 최대 700만원 이내 ■ 지역산업재산과 ☎042-481-8660	'15.1.1
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체계 마련	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'지재산분쟁대응센터'에 'K-브랜드' 상담창구 마련 - 지재산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방안 제시, 중국 상표상담 및 검색서비스 제공 등 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☎042-481-3573	'14.12.15.
해외 상표 브로커 대응체계 구축	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에서 해외 현지 상표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대응방안을 지원 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☎042-481-8227	'15.1.1
IP-DESK 기업지원 강화	의류·식품·화장품·프랜차이즈·전자 5개 산업단체 중심의 상표권 침해조사 실시 - 연간 1개사당 1건이었던 침해조사지원을 3건으로 확대하고, 한도액도 5,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- 해외출원, 세관지재산등록 지원도 연간 1개사당 4건→8건 지원 확대 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☎042-481-3573	'15.1.1
K-브랜드 보호 컨설팅	의류·식음료·화장품 등의 업종 100개사에 수출국가 현지에 맞는 상표개발 지원 및 브랜드 침해 예방 컨설팅 지원 ■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☎042-481-5992	'15.1.1
유명인사의 인격권 보호	일반인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는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상표등록을 거절 ■ 상표심사정책과 ☎042-481-5274	'15.1.1
변리사 표준계약서 보급	변리사와 의뢰인간 계약 표준사항 등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 ■ 산업재산인력과 ☎042-481-5920	'15.2.1

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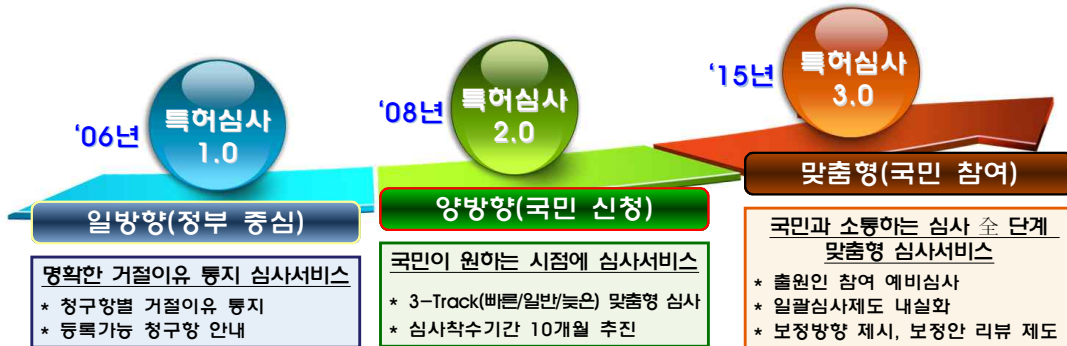
제도명 (지원시책)	달라지는 내용	시행일자
03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, 부담을 낮추는 제도		
원본증명제도	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%를 지원 - 건당 등록비용 10,000원 중 7,000원 지원 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☎042-481-5761	'15.1.1
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	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7	'15.1.1
외국어 출원의 보장·정정 기준 전환	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허용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7	'15.1.1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	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칭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- 6만2천원 → 5만 6천원으로 ■ 정보고객정책과 ☎042-481-5195	'15.1.1
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	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 중 "최근 3년 평가 실적"을 삭제하여 평가기관 진입 장벽 완화 ■ 산업재산진흥과 ☎042-481-5169	'14.12.1
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	3D 프린팅, 의학 분야의 원천기술 중 권리기간이 소멸된 특허의 활용전략을 지원 - 10개 과제, 총 7억원 ■ 산업재산정책과 ☎042-481-5931	'15.1월중
특허 공지에외 기간 확대	특허 출원시에만 공지에외주장이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7	'15.7.1 (예정)
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가능	1개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로 분리하여 출원하는 '분할출원'에 있어서, 등록결정시 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이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 ■ 특허심사제도와 ☎042-481-5397	'15.7.1 (예정)

참고 4 '15년도 신규 및 주요 정책

1 특허심사 3.0

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

- 국민소통·맞춤형·정확한 심사서비스 '특허심사 3.0'으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창조경제 기반인 고품질 특허창출 지원
- 예비심사 대상 확대, 일괄심사제도 내실화,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등 국민과 함께 정확한 심사를 하는 새로운 심사서비스 제공



2 심사품질 관리체계 전환

□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체계 개편

- 심사가 종결된 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 심사평가 방식을 심사 종결 前 평가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고품질 심사서비스 기반 강화
 - * 전산 시스템 개발(1/4분기) → 시범실시(2/4분기) → 본격 실시(하반기)
- 특허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에 심사오류가 사전에 치유 되도록 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
- 심사업무 관련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통하여 품질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지속적 품질개선(Continuous Improvement) 유도
- 대리인·출원인 간담회, 외부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,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심사품질 개선 추진

3 심사지원사업 안정화

□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확대

-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의 확대를 통해 심사지원을 강화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하고, 심사협력형 조사비율을 확대하여 예산 효율성을 향상
 < 선행기술조사 용역비율 및 협력형 조사비율 확대 계획 >

구분	'14	'15	'16	'17	'18
외주 용역 비율	52.8%	57%	64%	70%	70%
협력형 조사 비율	13.5%	30%	60%	80%	90%

□ 심사관 수준으로 조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심사지원사업 안정화 추진

- 신규조사원 연수교육 횟수를 3회(2월, 6월, 9월)로 확대하고, 중견조사원 교육을 운영하여 조사원 역량을 강화
- 선행기술조사원에게 특허넷 및 검색 시스템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행기술조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사업무 효율성을 제고

4 특허법 제도 개선

□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

- 특허정책이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제도*는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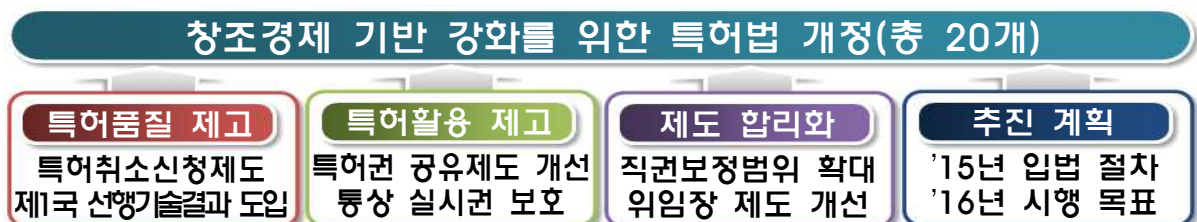
* 예) 특허등록 전후 품질관리, 공중심사 기능 강화 등

- 제도적 제약*으로 특허권 거래 및 활용이 어렵고 거래 현실과도 괴리

* 예) 통상실시권 등록 대항제도, 공유특허 지분활용 시 타 공유자 동의 필요 등
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품질·활용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

*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,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총 20개 과제 개정 추진



5 상표브로커 근절 대책

-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을 위한 상표심사기준 전부 개정('15. 1. 1시행)
 -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상표*, 저명상표를 희석화하는 상표**출원에 대한 상표법상 거절근거 규정을 구체화·명확화한 심사기준 제공
 - * 종업원, 동업자 등이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된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출원
 - ** 'VISA 콘돔', '샤넬 노래방'처럼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
 - 출원인이 타인의 상표임을 알고 출원했다는 점, 이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편승의 이익이 기대된다면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으로 보아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
 -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·연예인 명칭 등을 모방 출원한 경우, 상품화 가능성 및 상품·서비스업의 후원관계를 고려하는 등 상표 및 지정상품에 따라 상표법상 거절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

6 수수료 체계 정비계획

-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
 -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, 수수료 부담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·장기적 개편방안 마련
 - * 산업재산권 출원·등록 추이, 심사기간 단축 등 정책환경 변화, 책임운영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및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등
 - 특히, 개인·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감면 수준 및 국제적 조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도출
 - 수수료 원가분석, 외국사례 검토 및 과거 수수료 조정의 실제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수수료 개편 마스터플랜 마련
 - 도출된 개편안은 공청회 및 전문가 심포지엄을 거쳐 확정하고, '16년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 시부터 반영
 - * 개인·중소기업·대기업 등 특허고객 유형별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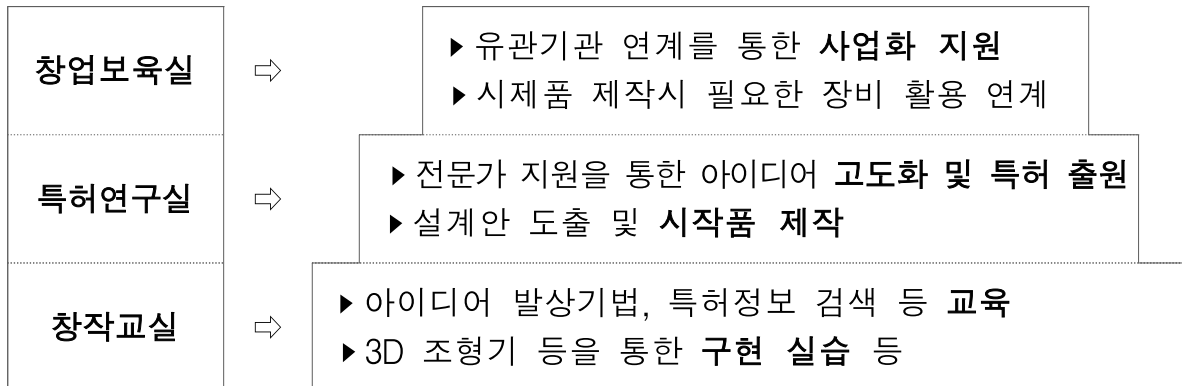
7 IP 창조 Zone 역할 및 기능

□ 아이디어 창출·구체화 지원을 위한 지역 아이디어 허브 구축

-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국민 누구나 상상력·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,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지재권화 지원

* '14년 강원·부산·대구·광주 지역에 개소, '15년 인천·전북 개소 예정

-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·지재권화를 지원하고, 지역별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, 사업화 지원



8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

□ 쏠 산업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'거시(Mega) 특허 전략 청사진*'을 구축하여 매년 정부·민간 R&D 방향으로 발표·제공

* R&D 현장활용성이 높은 출원동향, 부상기술, 기술격차, IP경쟁력 지표 위주 구성, '15년 사업대상 산업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'16년 쏠 산업분야로 확대

- 산업계 주요이슈 기술분야를 심층분석하는 '테마기술 청사진' 구축

* ex)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플렉서블 소재, '15년 5개 테마기술 내외 시범 추진

- 부처 R&D 기획과제 발굴 일정과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유망 R&D 과제 결과물을 맞춤형으로 적시 제공하여 활용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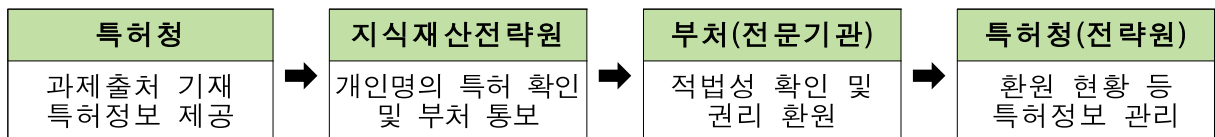
* 추가 조사·분석·편집을 통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계획(안) : '14년 6건 → '15년 10건

9 정부 R&D 성과물의 개인명의 출원방지 대책

□ 정부 R&D 성과물의 개인명의 특허출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현장의 인식제고를 위한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발간·보급

○ 과제출처 기재 특허* 및 NTIS 입력 특허의 개인명의 출원·등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* 「공동관리규정」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특허를 지원한 과제고유번호, 부처명, 과제명 등을 출원서에 기재한 특허



○ 개인명의 특허의 적법성,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는 '정부 R&D 특허출원 가이드라인'의 제작·보급(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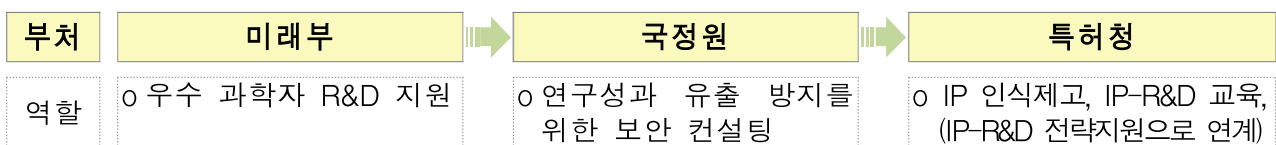
10 국가 중요 과학자의 강한특허 창출지원

□ 국가 중요 연구자의 강한 IP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컨설팅 추진

○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에 기술보안 컨설팅, 지식재산 및 IP-R&D 전략 교육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 컨설팅 지원(미래부, 국정원 협업)

* '14년 주요 연구자 4개 연구실 특허컨설팅 시범 실시 및 '15년 확대 추진(6개 연구실 이상)

<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 지식재산 컨설팅 추진 절차 >



○ 국가 재원이 집중투자되어 개발중인 우수기술*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권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'Core Patent 창출 지원**'을 강화

* 기초과학연구원(IBS) 산하 연구단 등 연 20억 이상이 투자되어 기술개발 중인 핵심·원천기술

** (내용) 청구항 설계, 출원전략 등 지재권화 전략 중점지원, (규모/기간) 12개/25개월('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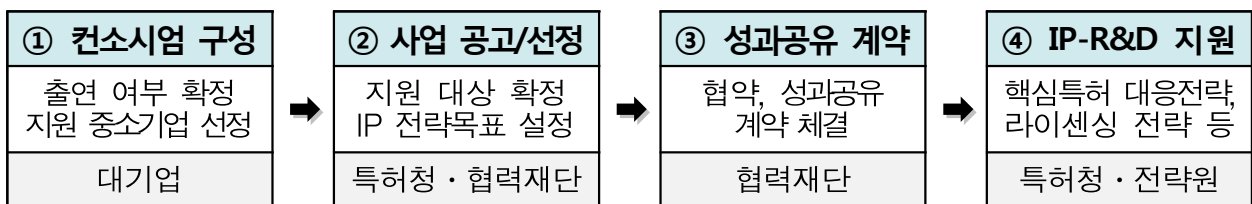
11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IP-R&D 전략지원

□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대·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IP-R&D 전략수립을 지원

○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'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제도'를 활용한 연계 사업으로 시범 추진

* (규모/예산) 20개 과제[특허청(60%, 12억), 대기업·중소기업(40%, 8억)]

<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IP-R&D 시범 사업 추진절차 >



12 소멸특허의 공공이용 확산지원

□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(3R 전략 컨설팅*)을 통해 신시장 개척, 상용화,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(10개 과제, 7억)

< 3R 전략 컨설팅 >

【Root】 원천 소멸특허가 반영된 제품 또는 기술을 탐색하여 성공 히스토리 분석

【Rights & Relationship】 소멸특허에서 파생된 후속특허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, 高 위험군 후속특허의 무효화 전략 및 소멸 특허지도 도출

【Roadmap】 글로벌 경쟁사의 후속 제품을 조사하여 소멸특허를 활용한 신규 제품 및 기술 구현 전략 분석 제공

○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의 소멸특허를 활용한 맞춤형·밀착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

-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*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

* 원천특허가 만료된 3D프린팅 제조기술 및 의약분야의 물질특허 분야

* 주요일정 : 상반기 공고(1.6~2.2), 기업 선정평가(2월), 전략수립 지원(3월~), 하반기 공고·지원(4~12월)

13 상표법 전부 개정 추진

-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상표법 전부 개정 추진
 - 부분개정으로 인한 과도한 가지조항 및 조문 상호 간 불일치한 부분을 조정하여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
 -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상표제도의 설계
 - 상표의 정의규정을 간결·명확하게 하고, 상표 유형을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확대
 -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'이해관계인'에서 '누구든지'로 확대
 -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제고 및 규제완화
 - 심사관 직권보정대상 확대,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에 의한 상표등록금지 규정 삭제, 심판청구 후 1개월 이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료 반환 규정 신설 등

14 지식재산무역수지 개발

-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관련 항목을 모두 반영한 '지식재산권 무역수지' 개발 및 발표('15 下)
-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반영

<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>

지식재산 유형	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	기술무역통계	(신규) 지식재산권 무역수지
특허·실용신안권	사용료(○)	사용료(○)	사용료(○)
	판매·구매액(X)	판매·구매액(○)	판매·구매액(○)
(산업)디자인권	사용료(○)	사용료(○)	사용료(○)
	판매·구매액(X)	판매·구매액(○)	판매·구매액(○)
상표권	사용료(○)	사용료(△*)	사용료(○)
	판매·구매액(X)	판매·구매액(△*)	판매·구매액(○)
저작권 및 저작인접권	사용료(○)	사용료(X)	사용료(○)
	판매·구매액(X)	판매·구매액(X)	판매·구매액(○)

* 제조법 등 기술지식의 이전을 수반하는 상표의 거래 및 라이선싱만 기술무역통계에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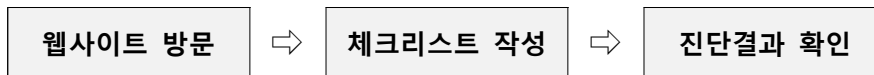
-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지식재산 유형별, 산업별, 기업 규모별, 교역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 및 분석

15 지식재산경영진단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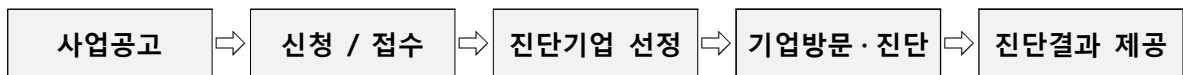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현황을 진단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수립 및 역량 향상에 기여

- 지식재산경영 인프라, 활동, 관리, 실적, 성과의 5개 분야 진단
- 중소기업 스스로 웹사이트 상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과 지식재산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·진단하는 심층진단을 병행

* 간이진단 절차 (필요 시 심층진단으로 연계)



* 심층진단 절차 (필요 시 컨설팅 지원) ※ 심층진단 총 예산 2.7억원, 50社 지원 예정



16 미래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

□ 분쟁 고위험 기술분야에 대해 '미래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'를 수립하여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

-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특허분쟁을 예측

* ('14) 스마트카, 3D 프린팅 → ('15) 의료기기, 사물인터넷(IoT)

* 기업 간 특허 매입·이전 네트워크 분석, NPEs별 중점 매입 기술분야 분석, 소송특허의 특허군(Patent Family) 분포 분석, 소멸특허 및 피인용 분석 등

- 주요 특허권자, 세부 기술분야별로 분쟁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이에 대해 효과적인 사전 대응방향을 제시

* 분쟁 위험도에 따라 세부기술별 대응준비 우선순위 제시, NPEs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 도출,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응전략 구체화

17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

□ 소송보험제도 3개년 발전계획(16~'18) 마련

- 청·보호협회·보험사·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소송보험 중장기 발전 TF 구성 및 발족('15.2~)

* T/F팀 구성 및 회의 개최('15.2), 소송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('15.4)

□ 소송보험제도 민간 확산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IP 단체보험 개발(~'15.9)

- IP 현황·수출국가 등을 고려, 일괄 가입형태의 신규 단체보험 상품 개발·확산

* (기존) 개별 기업 가입, 정부(특허청) 지원(80~50%) → (신규) 기업단체 일괄 가입, 중소기업청·지자체·업종별 단체 등과 1:1 매칭을 통한 지원

** (상품 예) 중국진출 및 현지화 희망기업의 세관조치 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등

□ 향후, 민간에서 자율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소송보험 인식 제고 활동과 더불어 상품 다양화 및 지원 확대 방안 마련(~'15.11)

- 환급형 보험(분쟁 미발생시 보험료 일부 환급) 개발 검토, 정부지원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신규 지원 확대 등

18 K-브랜드 보호강화 대책

□ 중국·ASEAN 지역 한국 브랜드(K-Brand) 보호체계 구축

- 현지 상표 확보 중요성에 대한 기업홍보 강화 및 해외진출전 권리 확보를 위한 해외 상표출원 지원 확대

- 현지 상표 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,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

* 악의적 상표 브로커로 추정되는 출원인에 대해 월 단위 출원 동향 검색

- 국내에서 중국 상표 상담·검색 서비스 제공 등 One-Stop 기업지원 체계 구축

*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內 분쟁 예방·분쟁 단계별(평시/경고/대응)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

-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직접 기업의 모조품 단속지원을 하도록 하여 현장 집행력 강화 추진

* 5개 산업단체(의류, 화장품, 식품, 프랜차이즈, 전자정보통신) 우선 추진

19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

□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확대를 통한 각국 세관단속제도 활용 유도

- 해외 세관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강화하고, 기업이 세관 단속 시 침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IP-DESK에서 지원

* 국가별로 상이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등을 고려하여, 세관 지재권등록 지원액 및 횟수 상향조정(특허청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조사('14.12))

- 독일 등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단한 지역에서는 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토록 IP-DESK에서 안내

< 세관 지재권 등록 및 단속제도 >

- (세관 조치) WTO TRIPS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**세관을 통한 지재권 등록제도*** 등을 운영
 - * 권리자가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면, 수출입시 모조품을 세관 모니터링으로 단속하는 제도
- (단속절차) 압류 청구 및 담보의 제공 → 모조품의 검사 → 모조품의 압류 → 모조품의 조사 및 결정 → 모조품의 몰수 및 행정처벌 → 담보의 반환

20 중소기업 IP제품혁신전략 지원

□ 이종분야 특허검색방법론(OPIS)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, 기술, 공정의 문제(성능, 품질, 원가 등)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
- 자금 부족 및 R&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속도, 적은 비용(High Speed, Low Cost)으로 제품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

- '13년(시범사업), '14년(사업 추진)에 이어 '15년에는 제품혁신 표준 방법론 정립 및 교육을 통해 민간에 확산할 계획

* 이종분야 특허검색방법론(OPIS; Open Patent Intelligence Search) : 이미 다른 영역의 특허기술분야에 존재하는 문제해결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특허검색방법론